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양근숙
(동의대학교)

1. 서론
2. 결혼이주여성과 사회적 포용성
 - 2.1. 결혼이주여성과 사회통합
 - 2.2. 사회적 포용성
3.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 개발
 - 3.1. 연구 설계 및 방법
 - 3.2.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 초안
4. 결론 및 제언
 - 4.1. 연구 요약
 - 4.2. 정책적 시사점 및 실천적 함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포용성 평가지표는 '선주민' 또는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량 중심 항목에 치우쳐, 결혼이주여성의 복합적 정체성, 가족 내 역할, 정서적 수용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포용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주관적 경험에 주목하여, 체감 기반의 지표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기존 포용

성 개념을 제도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심리·정서적 다섯 차원으로 재구성하고, 각 차원에 적합한 30개 구성요소와 이들의 주관적 체감을 반영한 74개 측정 지표를 도출하였다.

개발된 체감형 지표 체계는 향후 실증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통합 정책 평가·설계 단계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실천적 도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에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포용성, 체감형 지표, 사회통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제 이주는 일시적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제이주자 수는 약 2억 8,1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쟁, 기후 위기, 재난, 빈곤 등으로 인해 강제 이주한 이재 이주자 수는 약 1억 1,700만 명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가 글로벌 사회 질서의 필수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며, 각국의 이민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포용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주의 양상에 있어 최근 주목되는 구조적 변화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노동과 국제결혼 분야에서 여성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노동공급원이 아니라 사회 재생산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UN Women, 2023). 한국 또한 2023년 기준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이 약 43.8%에 이르며, 결혼이주여성은 약 13만 2천 명으로 전체 여성 이주자의 25%를 차지한

다(법무부, 2024). 이 같은 인구 통계는 이들이 가사·돌봄 노동을 넘어 경제 활동과 지역사회 형성 등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 확대는 다문화정책에도 반영되어, 초기 ‘안정적 적응 지원’ 중심에서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 확대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지원 및 제도 정보 접근성 부족과 같은 제도적 장벽, 사회·문화적 차별, 경제적 취약성, 심리·정서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 경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이처럼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체감 간의 불일치는 현행 평가 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포용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감 기반의 실천적 평가 도구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기존의 사회적 포용성 연구와 정책은 주로 서비스 제공자나 선주민 중심, 혹은 수혜 여부에 초점을 둔 정량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으며, 다층적인 배제를 경험하는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 체감, 정서적 수용감, 일상적 통합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소영, 2022; 송은지 외, 2020).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맥락과 복합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의 핵심 차원을 다차원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감 중심의 사회적 포용성 지표 초안을 도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은 어떠한 다차원적 구조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특

수한 맥락을 반영한 포용성의 각 차원(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정서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포함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실제 생활 세계와 감정적 수용 경험을 반영한 포용성 지표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정책 설계와 사회통합 수준 진단의 실천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과 사회적 포용성

2.1. 결혼이주여성과 사회통합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인구 구조의 보완과 가족 단위의 재구성, 지역사회 활력 유지에 있어 점차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결혼이주여성은 약 13만 2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25%를 차지하며, 이들이 양육하는 다문화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23; 교육부, 2024).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08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시행해 왔다. 특히 제4차 계획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정착 지원 대상’이 아닌 ‘자율적 참여 주체’로 규정하고, 언어교육·취업 지원·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안정적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이는 기존의 보호·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배제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민정책연구원, 2023). 첫째, 언어 장벽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제약을 넘어서 교육·의료·공공서비스 이용 전반을 가로막고, F-6 비자 체류 자격 불안정과 복잡한 시민권 취득 절차는 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둘째, 선주민의 문화적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은 결혼이주여성을 ‘가르쳐야 할 대상’ 혹은 ‘이질적인 외부인’으로 인식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망 형성을 제한하고, 주체적 자기표현을 억압한다(양근숙 외, 2024).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능력 부족·돌봄 부담·훈련 기회 제약 등으로 인한 경제적 배제는 비정규직·저임금 고용에 머무르며, 경제적 자율성과 안정성이 위협받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넷째, 가족 내 갈등과 외로움이 결합된 돌봄 환경은 불안·우울을 유발하며, 특히 혼인관계 해체 시 사회적 지지망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정소영, 2022).

이처럼 언어·경제·문화·정서 등의 다층적 배제가 상호작용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어, 단편적 정책지원만으로는 실질적 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성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나 참여 기회 확대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체감 경험을 핵심에 두는 통합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UNDP, 2016; 이민정책연구원, 2023).

2.2. 사회적 포용성

2.2.1. 사회적 포용성의 개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이주민이 제도·법제적 권리와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율적 참여를 경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뜻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포함만으로는 개인이 일상에서 ‘포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체감(감정적 수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주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실질적 참여가 제한되거나 제도 접근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정서적 고립과 공동체 단절은 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이은채, 2022). 따라서 이 같은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이 필수적이다. OECD(2018)는 포용성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참여 기회와 역량이 보장된 상태”로 정의

하며, UNDP(2016)는 ‘Access(참여)’, ‘Acceptance(수용)’, ‘Capability(능력)’, ‘Rights(권리)’ 네 요소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권리 보장보다 실현 가능성과 체감을 핵심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제도적 포용(언어지원·제도 정보 접근성 강화), 문화적 포용(고정관념·편견 타파), 경제적 포용(돌봄 부담 경감·직업훈련 확대), 정서적 포용(상담·멘토링·네트워크 지원) 등 네 차원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포용은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권리와 기회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착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즉,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통합의 전제이자 실천 과정으로서, 소수자나 주변화된 집단이 차별과 배제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한다(박형준, 2022). 이는 단순히 제도 내에 포함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관적 체감과 정서적 수용을 포함한 삶의 질적 조건으로서의 포용을 의미한다.

또한, 이 개념을 실제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체감 경험을 반영한 지표체계는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적용 시 응답자의 수용성과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결과와 주관적 체감 간 괴리를 좁히는 실질적 도구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포용성의 다차원 구조를 실증적 지표로 구체화함으로써, 한국 다문화 사회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2.2. 사회적 포용성 지표 관련 선행연구

한국 사회 내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은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통합 개념 간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양근숙 외(2024)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고정관념, 낮은 다문화 수용성, 민족중심 정체성, 자민족 중심주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관리 대상’ 혹은 ‘비주체적 존재’로 주변화하며, 제도적 포용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생활세계에서는 배제가 지

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은 법 제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어도, 언어, 법적 지위, 사회적 관계, 감정적 수용 등 다양한 층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실질적 실현은 사회적 포용성의 정교한 재구조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사회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포용성 강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포용성 지표체계를 제시해 왔으며, 특히 국제기구들은 포용성을 정책 설계 및 사회통합 평가의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다. UNDP(2016)는 포용성을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참여(access), 수용(acceptance), 능력(capability), 권리(rights)'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지표를 설계하였다. OECD(2018)는 특히 여성 이주민의 '시민권 실현, 고용 기회, 문화 표현 보장'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평등한 접근을 포용성 지표로 제시하며, 포용성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와 역량이 보장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여성가족부(2022)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21)의 국가포용성 지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등에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 지표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선주민' 이거나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복합적 정체성, 가족 내 위치성, 주관적 수용 체감 등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 포용성 지표들에도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제한점을 드러낸다. 먼저, 정책 설계자 중심의 시각이 강하여, 이주민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과 삶의 질 지표를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이분법적 응답 형식과 정량 중심 구조는 정서적 배제, 사회적 유대의 질, 관계망 안정성과 같은 심층적 포용 경험을 측정하기 어렵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아내, 어머니, 경제활동가 등의 '다층적 사회 역할'과 교차적 정체성은 간과되고 있으며, 단일한 '이주민' 범주로 일반화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 체감을 반영한 지표는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는 제도적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포용되고 있다’는 감정을 갖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성은 단순한 제도 접근 여부가 아니라, 정서적 수용감, 자율적 관계 형성, 권리 체감, 사회적 환영 등의 요소까지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지표 또한 당사자 중심의 체감 기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맥락과 감정, 경험의 다층성을 포착할 수 있는 통합적 포용성 지표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기존의 행정 중심 틀¹⁾을 참조하되, 정량보다 질적 요소, 참여 여부보다 참여의 의미와 수용감, 제도 접근보다 일상 속 권리 체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3.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 개발

3.1.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를 예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핵심 차원과 세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지표 초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회통합 및 포용성 지표는 정책 수혜 여부, 제도 접근 가능성, 참여율 등 행정 중심의 정량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주여성의 주관적 경험과 정서적 수용감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는 질적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단계에서는 기존 포용성 지표의 이론적 기반과 구조를 파악하고, 사회적 포용성의 주요 차원을 도출하였다. 문헌 선정 기준은 2013~2023년 발표된 연구 중에서 ① 결혼이주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 ② 사회통합·포용·배제 관련 개념을 포함한 연구 ③ 지표화·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연구로 설정하였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의 다문화·포용성 실태조사

1) 행정 중심 틀: 정량 지표와 수혜 여부 중심의 정책 평가 구조를 의미.

보고서에서 결혼이주여성 특화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수집된 지표들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맥락에 맞춰 범주화하고 유사 개념을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표 간 상·하위 관계와 개념 적합성을 연구자 간 교차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분석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성을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적 포용성’ 개념을 이들의 현실에 더 부합하는 ‘제도적 포용성’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치적 권리·참여뿐 아니라 언어지원, 제도 정보 접근성, 체류 안정성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과 차별로 인한 정서적 고립 및 자존감 저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포용성’ 차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특수한 생활 조건(예: 체류 자격, 가족 내 역할, 지역사회 내 위치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제도 중심·객관적 지표를 당사자 관점의 체감형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실제 참여 여부’보다는 “포용되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맥락과 내면적 수용감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의 재구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상 경험과 정서적 체감을 중심으로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이해 가능성(Accessibility)이다. 언어적 장벽과 교육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Delphi 패널 전문가와 설문 대상인 결혼이주여성 모두가 지표의 적절성과 대표성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는 문항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 둘째는 체감 중심성이다. ‘이용 여부’가 아니라 “나는 이 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느낀다”처럼, 당사자의 감정적 수용감을 직접 묻는 지표로 전환하였다. 셋째, 일상 밀착도이다. 이웃 관계, 자녀 양육, 지역사회 활동 등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맥락을 반영해 구성하였다. 넷째, 권리 주체성이다. ‘혜택 수령’이 아닌 “내 권리를 알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능동적 시민권으로서의 포용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구성된 사회적 포용성 지표체계는 제도적 접근이나 정책 수혜 여부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심리적 수용감, 정서적 안정

성, 지역사회 내 상호작용 수준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통합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진단하는 체감 기반 평가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3.2.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 초안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성을 다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정서적 다섯 가지 핵심 차원을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설계하였다. 각 차원은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포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조건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었으며, 하위 구성요소와 세부 지표는 모두 당사자의 체감 경험과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이 초안은 후속 델파이 조사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FGI 및 현장 예비조사를 통해 세부 문항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며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3.2.1. 제도적 포용성 구성요소 및 지표 초안 도출

제도적 포용성은 결혼이주여성이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사회제도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일상생활에서 공공 서비스 및 권리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핵심 차원이다. 이는 체류 안정성, 행정 접근성, 정보 이해력, 제도 이용 경험 등의 영역을 포괄하며, 사회통합의 기초 인프라로 기능한다. 기존 지표는 주로 체류자격 유형, 국적 취득 여부, 서비스 이용률과 같은 행정통계 중심의 정량적 접근에 집중되어왔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현황, 통계청의 행정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기구 또한 제도적 포용성을 이주민 통합의 필수 요소로 강조한다. 예컨대 OECD(2018)는 제도 접근성(institutional accessibility)을 포함한 '다차원적 통합 지표'를 제시하며, UNDP(2016)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수용을 포용성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기존 지표는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 인식이나 제도 신뢰, 정보 이해도, 언어적 장벽 등의 질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접근 및

해석 능력의 격차로 인해 제도 수용 경험이 왜곡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를 ‘자율적이고 권리 기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도적 포용성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체류 자격 안정성’, ‘국적 취득 의향’, ‘법률·제도 정보의 언어 제공 여부’ 등은 법적 기반 및 정보 접근성 범주로, ‘민원 처리 경험’, ‘공공기관 응대 만족도’, ‘제도 이해의 어려움’ 등은 행정 체감 경험 범주로 통합·재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도적 포용성은 ‘체류 및 국적 안정성’, ‘공공 서비스 접근성’, ‘정치·행정적 접근성’, ‘제도·정치적 권리’, ‘제도 신뢰도’의 5가지 구성요소와 총 15개의 측정 지표로 정리되었다(〈표 1〉참조).

각 구성요소는 단순한 이용 여부를 넘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해 가능성과 존중받는 경험 등 인지적·정서적 수용 수준을 반영하는 체감 기반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응대 만족도’는 “나는 공공기관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적 포용성을 단순한 행정 절차의 결과가 아닌, 시민권 기반의 실질적 참여 조건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며, 향후 사회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 제도적 포용성의 구성요소와 지표 초안

차원	구성요소	설명	지표 초안
제도적 포용성	체류 및 국적 안정성	체류허가 갱신의 용이성, 장기 체류 가능성, 영주권·국적 취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 국적·취득·유무 - 체류자격 변경 경험 - 장기 거주 가능성 인식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행정기관·교육·복지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언어·이용 제약 여부	- 공공서비스 접근 용이성 -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 언어지원 체계의 존재 여부
	정치·행정적 접근성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 정책 설명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 정보 접근성 - 정책 설명 이해도 - 공공기관 응대 만족도

차원	구성요소	설명	지표 초안
	제도·정치적 권리	법적 시민권 보유 여부 및 선거·행정 참여에 대한 권리 인식과 체감	- 선거 참여 경험 - 권리 인식 - 다문화정책 참여 여부
	제도 신뢰도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행정 절차의 공정성, 효율성,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제도적 보호 신뢰도 - 민원 처리 만족도 - 법적 보호 체감도
소 계		5개의 구성요소와 15개 지표	

3.2.2. 경제적 포용성 구성요소 및 지표 초안 도출

경제적 포용성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 독립성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자율적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는 핵심 차원이다. 기존 경제 지표는 주로 고용률, 소득 수준, 복지 수혜 여부 등의 정량적 측정에 집중되어 왔으며,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이민자 고용조사, 여성가족부 및 통계청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 왔다. 또한 OECD(2018), UNDP(2016) 등 국제기구는 노동시장 통합, 금융 포용, 고용 접근성을 경제 포용성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교차적 제약 조건, 예컨대 ‘자녀 돌봄, 언어 장벽, 시가의 경제활동 통제, 성별 역할 규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체감, 기회 접근성, 제도적 자원 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앞서 제시한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단순 수혜 여부가 아닌 경제적 주체로서의 권리인식과 체감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표 도출 과정에서는 관련 항목들을 7개 구성요소로 통합하고, 유사성 및 기능적 연계를 기준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 ‘생활비 지출 자율성’, ‘가구 내 경제 기여 인식’은 소득 자율성으로, ‘비정규직 비율’, ‘근무 시간 만족도’, ‘계약서 작성 여부’는 고용 안정성으로 통합하였다(〈표 2〉참조).

또한 소득 자율성과 사회보장 접근성은 단순한 이용 여부를 넘어서

주관적 체감과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 자율성은 “나는 내가 번 돈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가족의 경제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문항을 통해, 임금 수준, 경제적 기여 인식, 생활비 지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체감 수준을 진단한다.

이는 기존 정량 중심 지표가 간과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기반과 심리적 경제 역량을 반영하며, 실질적 포용 진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2〉 경제적 포용성의 구성요소와 지표 초안

차원	구성요소	설명	지표 초안
경제적 포용성	노동시장 접근성	적절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 기회 접근 가능성	- 구직 정보 접근성 - 직업 매칭 경험 - 노동시장 접근 제약
	고용 안정성과 질	현재 일자리의 안정성, 근로조건, 직무 안정감, 임금 수준 등	- 계약서 유무 - 비정규직 여부 - 직무 만족도 - 임금 적정성
	자격 및 경력 인정	자국 학력·경력의 국내 인정 가능성	- 출신국 학력·경력 인정 여부 - 자격증 활용 체감도
	사회보장 접근성	실업급여, 보험, 복지 등 사회보장 제도 이용 가능성	- 복지 이용 경험 - 사회보장 제도 접근 용이성
	직업 선택의 자유	원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율성 (구직권, 자기 결정권 포함)	- 자기결정권 체감 - 구직 선택 자율성 - 제도·문화적 제약 여부 - 가족의 제약 인식
	교육·훈련 기회	한국어, 직업기술 등 경제 활동 관련 교육 접근성	- 직업훈련 참여 경험 - 교육 정보 접근성 - 교육 수요 충족도
	소득 자율성	획득한 소득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가정 내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	- 임금 수준 - 생활비 지출 자율성 - 가구 내 경제기여 인식
소 계	7개 구성요소와 21개 지표		

3.2.3. 사회적 포용성 구성요소 및 지표 초안 도출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배제되지 않고 관계를 형성하며, 소속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질적 기반인 이 차원은 EU Social Inclusion Strategy, OECD Indicators of Integration, 한국의 다문화정책 로드맵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관계망 형성, 지역사회 참여, 차별 경험, 문화적 수용감, 소속감, 정보 접근성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존 사회적 포용 지표는 주로 커뮤니티 참여율, 자조모임 여부, 서비스 이용률 등 정량적 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제약과 정서적 체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언어 장벽, 육아 부담, 문화적 거리감, 시가 중심 가족 구조 등은 물리적 참여 자체를 제한하며, 단순 수치는 이들의 사회적 배제 현실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관계의 질’, ‘차별의 정서적 인식’, ‘문화적 존중 체감’, ‘참여 기회의 실질적 접근 가능성’ 등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의 체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지표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에서 추출한 사회적 포용 관련 요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과 실무 워크숍을 통해 6개 구성요소와 13개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표 3〉참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단순한 유무보다 신뢰성과 정서적 지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제되었으며, ‘차별’ 항목은 거시적 통계보다는 일상에서의 미시적 배제 경험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체감’은 결혼이주여성이 주류사회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지역사회에서 포용받고 있다고 느낀다”, “필요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단순한 사회적 참여의 유무나 빈도보다는 정서적 수용성과 관계의 질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기존의 정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사회통합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 틀로 기능할 수 있다.

〈표 3〉 사회적 포용성의 구성요소와 지표 초안

차원	구성요소	설명	지표 초안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관계망 접근성	지역사회 내 이웃, 친구, 커뮤니티 등과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 정도	- 친구 유무 - 관계 유지 체감
	공공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공공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이해 수준	- 복지·보건·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 공공정보 접근성·이해도
	차별 경험 체감	일상 속에서 명시적·암묵적 차별을 체감하는 정도	- 차별 인식 정도 - 다문화에 대한 체감 - 인종·문화 관련 편견 경험
	공동체 활동 참여	결혼이주여성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및 경험	- 자원봉사·공공활동 참여 경험 - 지역 행사·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회적 보호 체감	공동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신뢰 수준	- 응급 대응 신뢰도 - 위기 시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
	사회적 소속감	자신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수용 수준	- 소속감 인식 - 집단 내 일원이라는 감정
소 계	6개 구성요소와 13개 지표		

3.2.4. 문화적 포용성 구성요소 및 지표 초안 도출

문화적 포용성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 사회로부터 존중과 수용을 체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차원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 문화에 얼마나 적응했는가’를 측정하는 동화주의적 접근을 넘어, 상호 존중의 문화 환경 속에서 이주여성이 자율성과 표현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의 국제 지표(EU, OECD 등)와

국내 연구들은 다문화 존중 태도, 문화 표현 기회, 언어권 보장, 문화 인프라 접근, 다문화 교육 수혜 등을 문화적 포용성의 구성요소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주로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 적응 수준에 중점을 둠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욕구와 상호문화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언어 사용의 자율성, 또는 문화적 억압 및 주변화 경험 등은 양적 지표로 포착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포용성의 판단 기준을 기존 주류사회의 수용 여부나 적응 수준이 아닌,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존중과 표현 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동화주의적 모델의 한계, 언어능력 중심 지표의 편향성, 수용 구조의 사회적 조건 미반영, 문화적 소속감의 심리적 지표 결여 등 기존 지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 뒤, 문화 표현의 자유와 상호문화적 경험, 실용적 정보 접근성,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 태도, 다중문화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지표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 전환 논의에 따라, 기존 정량 중심의 문화 참여 지표를 이주여성의 정서적·관계적 체험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전문가 자문과 실무 워크숍을 통해 총 6개 구성요소와 12개의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표 4〉참조). 문화적 수용성 차원의 ‘다문화에 대한 존중 인식’은 “나는 내 문화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언어권 보장’의 경우는 “나는 모국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은 체감 중심의 진술문 형식으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문항 설계는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포용 수준을 정서적 수용성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 문화적 포용성의 구성요소와 지표 초안

차원	구성요소	설명	지표 초안
문화적 포용성	문화 수용성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역사회 내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 다문화에 대한 존중 인식 - 타문화 수용성에 대한 사회 태도
	표현 기회	전통·의상·종교·음식 등 자신의 고유 문화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	- 문화 표현의 자유 - 문화 행사 참여 가능성
	언어권 보장	한국어뿐 아니라 모국어 사용과 관련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도	- 모국어 사용의 자유 - 언어 억압 여부
	문화 교류	지역사회 내에서 타문화 간 교류 기회가 존재하고, 이주여성이 이에 참여하는 경험 여부	- 다문화 교류 행사 경험 - 이웃과의 상호문화 교류 경험
	문화 인프라 접근성	도서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이용 편의성	- 문화시설 접근성 - 이용 경험과 편리성
	문화 교육 수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정도	-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 교육 내용 수용성과 효과 인식
소 계	6개 구성요소와 12개 지표		

3.2.5. 심리·정서적 포용성 구성요소 및 지표 초안 도출

심리·정서적 포용성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정신건강 유지 차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망의 작동 여부, 정체성 확립, 심리적 회복 자원의 접근성 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핵심 차원이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포용된 상태일지라도, 일상 속에서 자신이 ‘편안하고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수용 상태는 사회통합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OECD(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여성가족부 실태조사(2022), 국내 다문화 적응 및 심리 연구들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 자아

존중, 정서적 지지망, 심리적 회복 자원, 안전감, 소속감 및 정체성, 가족 내 스트레스 등은 이 차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제시되어 왔다.

기존 지표는 우울·불안 점수, 상담 이용 여부, 의료적 진단 등 제도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었으며, 정작 당사자의 주관적 체감이나 비공식적 지지망 활용 등은 지표화되지 못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언어 장벽, 문화적 거리감, 정서 표현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공식 심리 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실질적인 회복 자원은 가족이나 동료 이주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정서적 포용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표를 체감 중심 문항으로 전환하였다. ‘자기인식 및 자긍심, 사회적 소속감 및 안정감, 정서적 안정감, 정서적 지지 자원, 가족 내 정서적 안정성’ 등 총 6개 구성요소와 13개의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표 5〉참조).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한 안전감’ 구성요소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평가하며,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회의 제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느낀다”와 같은 체감 기반 문항을 통해 측정된다. 이러한 구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보다 정밀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표 5〉 심리·정서적 포용성의 구성요소와 지표 초안

차원	구성요소	설명	지표 초안
심리·정서적 포용성	자기인식 및 자긍심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	- 자기효능감 - 자기 가치 인식 - 정체성 수용
	사회적 소속감 및 관계 안정감	지역사회로부터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정도	- 지역사회 소속감 체감 - 구성원으로서의 존중 인식

차원	구성요소	설명	지표 초안
	정서적 안정감	일상에서 우울, 불안, 긴장 등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	- 정서적 평온감 - 감정 조절 가능성
	정서적 지지 자원	위기나 어려움 발생 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기관, 자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 유무 - 상담 및 지원 자원 이용 경험
	가족 내 정서적 안정성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정서적 고립,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하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반영	- 가족 내 갈등 경험 - 정서적 부담 및 소외감 체감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감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 내 안전감 체감 - 위협·위협 경험 여부
소 계	6개 구성요소와 13개 지표		

이로써 본 연구는 선행 문헌 분석과 국내외 지표 검토, 구성요소의 이론적 재정비 및 전문가 자문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 체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포용성 지표 초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사회적 포용성은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정서적 차원의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총 30개 구성요소와 74개의 체감 기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며, 결혼이주여성이 실제로 느끼는 포용의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 정책 중심·수혜 중심의 평가지표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삶의 질과 통합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천적 평가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이주여성 대상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4.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을 다차원적 지표 체계로 구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 지표 초안을 개발하였다. 문헌분석과 국내외 포용성 프레임워크 검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포용성의 차원은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정서적 총 5개이며, 각 차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경험과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최종 지표 체계는 5개 차원, 30개 구성요소, 74개 체감형 지표로 구성된다. 제도적 포용성은 체류 및 국적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 5개 구성요소와, '장기 거주 가능성 인식', '공공서비스 접근 용이성', '권리 인식' 등 15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경제적 포용성은 노동시장 접근성, 자격 및 경력 인정, 소득 자율성 등 7개 구성요소와 '구직정보 접근성', '자격증 활용 체감도', '가구 내 경제 기여 인식' 등 21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적 관계망 접근성, 공동체 활동 참여, 사회적 소속감 등 6개 구성요소와 '차별인식 정도', '자원봉사 및 공공활동 참여 경험', '소속감 인식', 등 13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문화적 포용성은 문화 수용성, 언어권 보장, 문화 교류 등 6개 구성요소와, '다문화에 대한 존중 인식', '모국어 사용의 자유', '다문화교육 행사 경험' 등 12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심리·정서적 포용성은 자기 인식 및 자긍심, 정서적 안정감, 가족 내 정서적 안정감 등 6개 구성요소와 '자기 가치 인식', '정서적 평온감', '가족 내 갈등 경험' 등 13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제도·정량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포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2. 정책적 시사점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을 이론적 고찰과 문헌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구조화하고, 이에 기반한 지표 초안을 도출하였다. 비록 실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된 기존 지표의 한계와 결혼이주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성요소 재구성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책 평가 단계에서 정량 지표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포용 체감’을 측정하는 체감형 지표를 병행 적용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각 포용성 차원별로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 방향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컨대, 제도적 포용성에서는 체류 안정성과 정보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경제적 포용성에서는 차별 없는 고용 접근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 사회적 포용성에서는 비공식 관계망과 공동체 소속감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문화적 포용성은 동화 중심이 아닌 상호문화적 관점의 문화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심리·정서적 포용성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지지 자원의 접근성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드러났다.

셋째,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표 초안은 향후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 사전 진단 또는 효과성 평가를 위한 초기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 맞춤형 다문화 정책 수립 시 이 지표 구조는 평가 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기반 지표 설계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체감 경험을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입증함으로써, 체감 중심 포용성 평가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체감형 지표 초안은 향후 실증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 설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국제이주기구(IOM). 대한민국 사무소(2024). 전 세계 최신 이주 동향과 앞길의 도전 과제를 담은 『세계이주보고서 2024』 발간, (검색일: 2025.06.08)
- 박형준(2022).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다문화연구』 16(2), 23-45.
- 송은지 외(202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체성 형성 과정, 『한국사회복지학』 72(3), 221-243.
- 양근숙 · 정지현 · 권미영(2024).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동문사
- 여성가족부(202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1」 결과 보고서
 _____(2022).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세종: 여성가족부
- 이민정책연구원 (2023). 한국의 지역별 이민자 통합 현황 분석. 세종:
 이은채 (202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 사회〉, 69, 127-161.
- 정소영(2022). 다문화정책의 성과 평가와 체감 포용성의 괴리: 이주민 경험 기반 접
 근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 49(2), 33-58.
- 통계청(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Daejeon: 통계청.
 _____(2024).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_____(2021).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2021). 국가포용성지수 개발 연구.
- UNDP(2016). Human Development Report: Social Inclusion, <https://hdr.undp.org>
- United Nations(2018).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fugeesmigrants.un.org](https://www.refugeesmigrants.un.org) [refugeesmigrants.un.org](https://www.refugeesmigrants.un.org).
- UN Women(2020).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All Migrant
 Women(Policy Brief No. 14). New York: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women.org](https://www.unwomen.org).
- OECD(2018). *Opportunities for All: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검색일: 2025.06.08.)

필자 소개

성 명 양근숙

소 속 동의대학교 겸임부교수 / 세상과 소통하기 대표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전자우편 ygs0604@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rceived Social Inclusion Indicators for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Yang, Geun-sook
(Dong-Eu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inclusion as perceived by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n society. Existing evaluation frameworks have predominantly reli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designed for native residents or general immigrant populations, thus failing to adequately capture the complex identities, familial roles, and emotional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esponse, this study focuses on reconstructing perception-based indicators that reflect how these women feel socially included in their everyday lives.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 concept of social inclusion was restructured into five key dimensions: institution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emotional. Based on these dimensions, the study identified 30 core components and developed 74 indicators that reflect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inclusion across each domain.

The proposed perception-based indicator system is expected to undergo empirical validation in ter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It can serve as a practical foundation for evaluating and design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Ultimately, this tool is anticipated to enable a more accurate assess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s quality of life and their level of social integration within Korean society.

[Key words] marriage migrant women, social inclusion, perception-based indicators, social integration, multidimensional assessment

투고일 2025. 06. 08 / 심사일 2025. 07. 13 / 게재확정일 2025. 07. 17

